

장동혁, 이르면 내일 쇠신안 발표 당 개혁·외연 확대·尹 단절 필요

장 대표 ‘걸림돌 제거’ 발언 등에
중도층 포용 메시지·개혁 없음을 뜻
지지층 확대 노력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하는 당 쇠신안이 이르면 오는 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말과 행동에서 중도층보다 강성 지지층을 위한 목소리를 내온 장 대표가 노선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쇠신과는 장 대표의 쇠신안에 중도층이 관심있어 할 만한 윤석열 전 대통령 12·3비상계엄 선포·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외연 확장 및 인재 영입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장 대표를 만나 “지금 또 화합도 해야 하고, 단합도 해야 한다. 젊은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쇠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 신년인사회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인선 4개월 만에 사퇴한 것도 장 대표에게 쇠신 의지가 읽히지 않아서라는 설도 나왔다.

다만, 장 대표와 자강파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지만, 윤 전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을 거치며 절연했고 지난 전 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 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장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이걸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 입장에서 걸림돌은 당내 친한계(친한동훈계)를 꾸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 책임이 있다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장 대표의 쇠신안이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며 “중도층이 원하는 메시지나 개혁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당 내에선 당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노력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당의 노선 투쟁이라 할까, 내분이라 할까 이것들에 당원과 국민이 싫증을 많이 내고 짜증을 내지 않나”라며 “저는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3선 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쇠신안 발표를 앞두고 “여의도연구원(당 싱크탱크)을 비롯해서 당의 개혁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공감받아야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외연 확대 문제다. 전직 대통령(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을 한 사람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에 대한 소구력을 강하게 하다보니 외연이 좁아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저는 쇠신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이 갖는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문제라든가 정책적 측면을 과감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이혜훈 청문회 이틀동안 진행 강력 촉구”

폭언·증여세 의혹 등 논란 속속
정청래 “후 대통령 결정 도와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한다면 이틀은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넘치는 의혹에 곤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주장도 나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노른자’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을에서 출마한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할 결심한 이후 이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고 ‘배신자’ 낙인을 찍고 있다.

청문회를 준비할 국민의힘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일동은 전날(5일) 성명서를 내고 통상 하루 일정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은 국민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서초 갑에서 세 번 연속 공천받을 정도로 당에서 키운 인재인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가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인격모독성 폭언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최근 10년 새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110억원 이상 증가 ▲배우자 영종도 토지 매입, 수용 과정에서 약 3배 차의 의혹 ▲임신 중이던 현직 구의원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에 도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간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한 ‘엄마 찬스’ 논란을 꺼내들었다.

박 간사는 “이 후보자는 ‘금수저 삼형제’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회사의 비상장주식을 800주씩 모두 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재산 상 각각 10억3000만원, 총 31억원에 달한다. 2016년 10월에 65%, 2021년 2월에 35%를 증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증여세 납부 내역이 수상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에 세 아들이 각각 4300만원씩, 총 1억2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2021년은 장남이 30살, 차남 28살, 삼남은 24살에 불과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간사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증여세를 냈나.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나”라며 “또 2016년 증여분은 증여세 납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증여세를 내긴 한 건가. 세금을 냈다고 한들, 2016년은 세 아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때인데, 무슨 돈으로 수천 만원을 냈나”라고 물었다.

민주당도 일부 의원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결단을 믿어줘야 한다고 논란을 애써 잠재우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 후보자의 끊이지 않는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순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 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입장에선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 이쪽(민주당)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 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영배 與 의원,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 잠정중단 합의

“지방선거까지 시위 중단하기로
서울시민 겪는 불편 해결하고
장애인 목소리도 정치권서 논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만나 ‘출근길 지하철을 막는 연착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과 만난 뒤 “전장연과 앞으로 지방선거 끝나는 6월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정치권의 테이블에는 정작 여러분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한 번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혜화역으로 갔다. 서울시민들의 겪는 불편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더이상 서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만나 ‘출근길 지하철을 막는 연착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실

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않겠다. 장애인 분들이 매일 지하철 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 분들에게선 지하철 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요구를 하기 위해 정치권에 항의하고 계시다”라며 “그러나 거기에 오세훈 시장은 없다.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고자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여러분들의 고단한 이웃들이 있을 뿐”이라며 “아무 힘도 없고,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시발서를 쓰고 징계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서울시장은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편안히 청사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홍 기자

쿠팡, ‘성장대출’ 명목 고리대금업 운영

금리 18.9%·대출 끼워팔기 의혹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쿠팡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라며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5.9%~12.5% 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4%대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 실제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는 “끼워팔기 의혹도 있다.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출 약정 시에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 구조로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